

1-1	2021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조일환 사무관 오성현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I. 사업개요

1. 목적

-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20년		
적당 생산금액 증가율(%)	4.9	1.6	1.6	4.2	-	‘21.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18,933	70,000	70,000	70,000
- 국비(100%)	118,933	70,000	70,000	70,000

* '22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상 투입계획(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기재부와 협의 결정)

II.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근해어선 자율감척 >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 희망자

-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감척시행계획의 목표를 초과하여 어업자가 신청한 경우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어획량 등 제한여부 ② 수산관계 법령 위반정도 ③ 선령 ④ 어선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 근해어선 직권감척 >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

- ‘21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감척을 신청(희망)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대상

-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 ① 선령 ② 어선톤수 ③ 어선마력수 ④ 법령 위반 횟수 ⑤ 법령 위반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근해어선 자율감척 >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
-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
-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조업실적이 불입 2.2.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선원 1인당 지급금액은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 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을 지급(다만,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되, 지급대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관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지급대상은 감척대상자 선정 통보일*(어업여건상 선정 통보일 이전에 조업을 중단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업 중단일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조업중단일 이전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조업중단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직권감척 불응하였다 수용한 경우는 동의서 제출일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신청서의 어선원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위 본문 단서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일 때에는 2개월분을,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3개월분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때는 4개월분을,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는 5개월분을, 12개월 이상인 때는 6개월분을 지급한다. 근로기간은 과거 5년간 연근해어선 근로기간을 합산한다.
- 감척 후 재취업한 어선이 다시 감척되는 경우에는 이전 감척어선의 조업 중단 이후에 연근해어선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다.
-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공고일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text{※ 수령액} = A(36-B)/36\text{개월} \times C + B(\text{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text{개월} \times C$$

A : 선단조업기간(월) /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 C : 폐업지원금(50%)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 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근해어선 직권감척 >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의 경우는 85%,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경우는 75%, 120일 이상의 경우는 70%를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등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절차에 따라 지원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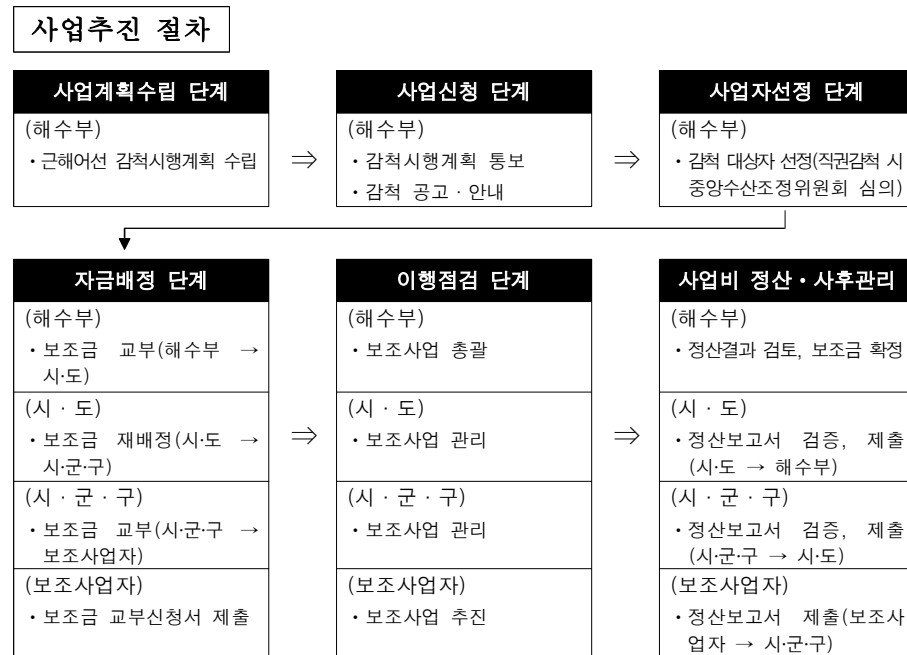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직접수행(국고 100%)

5.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1]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2]
- 어선·어구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붙임 3]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붙임 4]
- 어선원 실태조사서[붙임 5]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식 3]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전년도 1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전년도 1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공고시기 : 전년도 11월

지자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IV.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2.5월까지)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근해어선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추진절차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척 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 2)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5)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나.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대상 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 2)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
- 3)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 4) 2021년도 사업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도 사업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다. 사업 집행체계

-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
-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 (1) 사업 안내 등 홍보
 - (2)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 (3)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 (4)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 (5)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수역 조업 중단일 기준 조업실적 적용 가능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타선단 부속선과 대체하려는 경우는 부속선의 소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선대체 계획서 및 조치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5) 일본 EEZ 조업허가 어선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중 EEZ 조업실적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전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가) 조업실적은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관한 절차규칙」의 어획실적 보고 자료로 확인한다.
- (나) 전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3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 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다)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라)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척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또는 직권감척 시에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문”을 신청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직권감척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적용)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시·도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통보된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서식 1]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 처리절차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 중 해당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어업자)에게 통보한다.
- 3) 시·도지사는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본인의 시·도내 감척 우선순위 등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21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 5)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용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붙임 3]에 의한다.
- 3) 각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필한 평가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2) 중앙(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을 인도할 때까지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 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사의 목록 및 장비상태를 확인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단, 변동,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잔존가치평가액에서

감액하거나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때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선감척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 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 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 1) 폐업어선 중 선령 15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 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한다.

-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예정 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7-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 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어선 및 어구, 장비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바.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

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일(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 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2]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 (목적)**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어업허가증 사본 1부②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5]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규모(톤수, 마력)가 큰 어선
 -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어구
 -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횡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6.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시·도지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어선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행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감척 어선을 확인하는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8.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행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행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행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3]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25	20
강화플라스틱(FRP)	20	10
나무	15	10

다. 기관

-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제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의장품(艤裝品)

- 1) 의장품은 복성식(複成式)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제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 2) 의장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3) 의장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 4) 의장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가) 근해어업의 경우 :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 5)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제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 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 라)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예비망을 포함하여 표준수량의 2배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관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관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5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4	틀
		오비기 · 수비	2	식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45,000	미터
		20톤 ~ 40톤	54,000	미터
		40톤 이상	63,000	미터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돛 1개씩 포함	15	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 ~ 20톤	3,200	개
		20톤 ~ 40톤	7,000	개
		40톤 이상	10,000	개
	그 밖의 통발 (홍게·게)	8톤 ~ 20톤	2,500	개
		20톤 ~ 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낙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남도·경기도·인천광역시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돛 1개씩 포함	20	틀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게)	8톤 ~ 20톤	4,000	개
		20톤 ~ 40톤	5,500	개
		40톤 이상	7,000	개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114,000	미터
		20톤 ~ 40톤	147,000	미터
		40톤 이상	225,000	미터

※ 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 대차 등)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써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돛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어구, 어선의 시설·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붙임 4] '21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사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 질	기준가격 (a)	신청금액 (b)	신청율 (b/a*100)
예시)		(근해자망)			유· 무기록			신통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사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질	비고
예시)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통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 작성방법 >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띄어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통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15.83톤 → 15)
 - ※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통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붕수망어업	근해붕수망어업	근해붕수망	붕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서식 2]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 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날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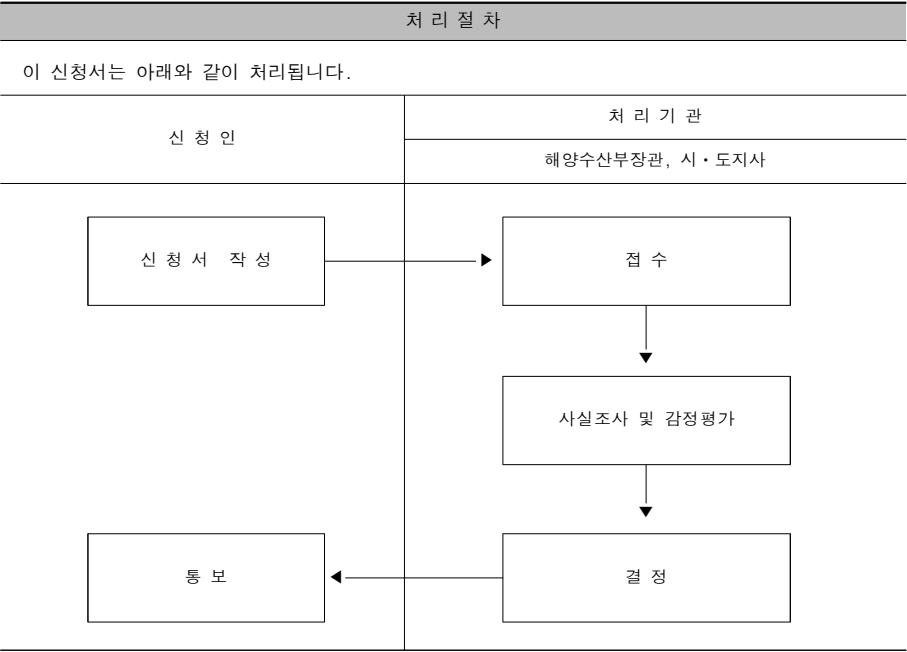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 1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 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5]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지원 세부지침 별지 서식]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어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신청인(생활안정지원금 수급 어선원에 관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승선기간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업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어선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4. 「선원법」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선원명부 1부 5.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용 금융기관 통장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어업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1]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전년도 11월	해양수산부
○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전년도 11월	해양수산부, 시·도
○ 근해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등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전년도 11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 결격여부 확인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수시	시·도 (시·군·구)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관할 시·도에 통보, 필요 시 추가접수 안내	수시	해양수산부, 시·도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수시 (사업자 선정 시)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수시	해양수산부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수시	시·도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분기	시·도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1-2	2021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조일환 사무관 오성현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I. 사업개요

1. 목적

-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 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어구 감척 계획서를 연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20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4.9	1.6	1.6	4.2	-	'21.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7,475	9,736	7,791	6,839
- 국비(80%)	5,980	7,789	6,233	5,471
- 지방비(20%)	1,495	1,947	1,558	1,368

* '22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상 투입계획(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기재부와 협의 결정)

II.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이하 “어선감척”이라 함) 대상 업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따른 12개 구획어업 중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결과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우선 고려사항 :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 기타 어획강도가 높고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경우 폐업희망 어업 등 시·도지사가 정할 필요가 있는 어업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른 대상업종을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붙임 2] 2.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업실적(60일 미만)이 저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한다.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과 신청인의 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연안·구획어업의 직권감척은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른다.
- 연안·구획어업 직권감척 시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국비 80%, 지방비 2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30일 이상 60일 미만의 경우는 85%,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0%, 90일 이상 120일 미만의 경우는 75%, 120일 이상의 경우는 70%를 지원한다.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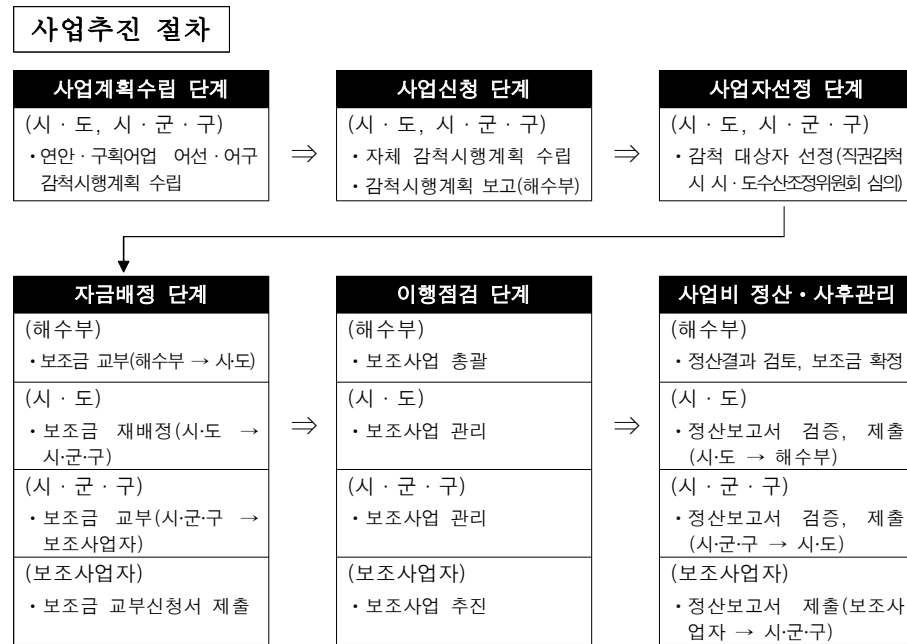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5.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2]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3]
-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기준[붙임 4]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지자체

-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 보고(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지자체

- 「연근해어업구조개선편」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IV.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2.5월까지)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21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51,951	74,463	74,463	74,463	74,463
통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87,847	98,830	110,284	110,284	110,284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59,338	99,422	99,646	99,646	99,646
선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89,686	91,134	96,438	96,438	96,438
조망	15,324	19,039	45,529	45,529	45,529	45,529	68,436	69,980	69,980	69,980
들망	59,042	59,042	59,042	59,042	91,574	94,188	94,188	94,188	94,188	95,496
연안개량 안강망	51,020	57,770	71,916	78,056	78,056	78,056	99,270	101,660	101,660	101,660
정 치 성 구 획 어 업	건망어업		건망		50,361					
	들망어업		들망		34,856					
	승망류어업		각망		33,083					
			호망		13,647					
	장망류어업		낭장망		68,571					

1. 사업계획

가.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 1)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 4) 2021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 1) 해양수산부는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물량·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
-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 (1)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2) 사업대상 업종 선정
 -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공고
 -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6)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1), (2)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업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타선단 부속선과 대체하려는 경우는 부속선의 소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선대체 계획서 및 조치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본문 사업대상자 1.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 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정

○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정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직권감척 및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제외한다.

3. 어선·어구 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 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감척시행계획”, “어선 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어구 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라) 어선·어구 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 [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서식 1]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어선·어구 감척 신청서류
 - 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다)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폐업지원금의 액수가 기준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급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정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21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별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용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 3) 각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필한 평가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 4) 감척 어선을 확인하는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1)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을 인도할 때까지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성구획어업 중 어구의 부설이 돌돛으로 인하여 인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염물질 제거 후 수산생물 서식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성구획어업의 어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사의 목록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인도받아야 한다. 단, 변동,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잔존가치평가액에서 감액하거나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때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선감척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 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함
-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해체처리 등

-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 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

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times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마.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②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6.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7.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

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9.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 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0. (기타사항) 어선·어구 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준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 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날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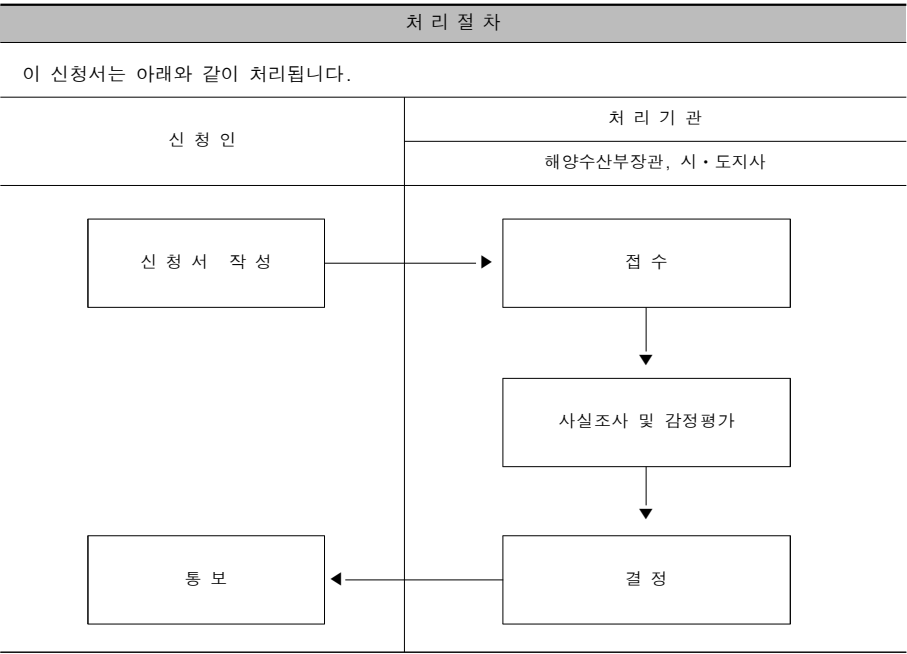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 1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 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 종류	[]육상디젤,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1]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월	해양수산부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안내광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2월 (신청기간 개시일 15일전)	시·도 (시·군·구)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3월	시·도 (시·군·구)
○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목표 미달시 추가접수 안내	3월~4월	시·도 (시·군·구)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4월~5월	시·도 (시·군·구)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5월~7월	시·도 (시·군·구)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6월~8월	시·도 (시·군·구)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2]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절차(예시)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 산부	즉시	○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 산부	즉시	○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 이상	○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 기준가격,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 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 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1-3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활용 지침
-----	------------------

▶ 이 실태조사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조일환 사무관 오성현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추진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어업실태조사)

3. 사업기간 : '13년~계속(매년 실시)

- 근해어업 실태조사(국비 100%), 연안어업 실태조사(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총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소 계	9,792	1,310	1,300	1,292	1,412	1,292	790	795	800	800
근 해	2,592	350	340	332	452.5	332.5	190	195	200	200
연 안	7,200	960	960	960	960	960	600	600	600	600

4. 사업대상 : 연근해 41개 업종(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구분	근해어업(21)	연안어업(8)	구획어업(12)
업종	외끝이대형저인망	연안개량안강망	안강망
	쌍끝이대형저인망		들망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건망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연안선망	건간망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	연안통발	지인망
	대형트롤	연안조망	승망류
	동해구중형트롤		장망류
	대형선망	연안선인망	선인망
	소형선망		해선망
	근해채낚기	연안자망	새우조망
	근해자망		패류형망
	근해안강망	연안복합	실뱀장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잡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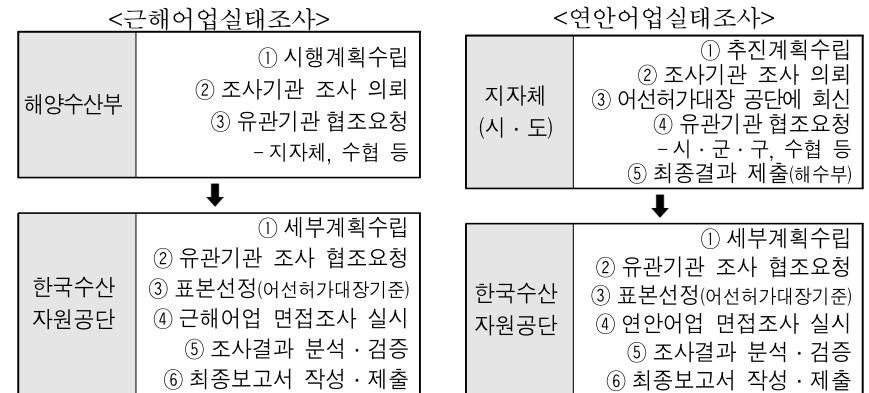
II. 조사내용 및 활용방안

1. 조사내용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 기준으로, 어업종사자별 면접조사 추진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① 일반현황	인적사항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의 수·연령·성별·경력 등
	어선	어선의 톤급별·기관별·선질별·선령별 자료 등
② 조업실태	어구	어구의 종류·표준수량·형태·사용어구·보유어구 등
	선원	선원의 수·국적·연령·성별 및 임금 등
	조업	조업일수, 항차수 등
	어획	어획종, 어획시기 등
	생산	생산단가, 생산량 등
③ 경영상태	수익	판매액(위판액), 어업외 수입 등
	비용	생산관리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부채	어업관련 부채, 비어업관련 부채
④ 감척의사	자산	어선, 기관, 어구 등
	감척의사	감척사업 만족도, 감척 희망의사 및 시기, 사유 등

2. 추진절차



3. 활용방안

- 지역별·업종별 어업구조(조업동향 및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
 - 업종별 연령(고령화), 마력·톤수·조업일수(어획강도), 어구사용량, 어업이익(경영상태) 등
 -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감척대상 업종 및 감척 필요 척수(안) 제시
 - * 필요시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어업허가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무조업어선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지원
- 어업인 현안 및 요구사항 지원·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고령화 및 선원수급 문제, 면세유지원, 환경개선(폐어구) 사업 확대 등